

# “기표용지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며 곳곳 실랑이

선관위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광주·전남 혼란

### “기표용지 어디로 가나” 항의하고 추운 날씨에 야외 장시간 대기 자치구 실수에 선거인명부 제외 반발...선거권 회복 방법도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데 따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투표 관리 대책이 비상으로 떠올랐음에도, 선관위는 단일한 대처로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존재 의미조차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은 선관위가 직접 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조차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뤄진 이틀간의 사전 투표 과정에서 확진·자가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 지적이 잇따랐다.

5일 나주시 나주중부노인복지관에서 오후 6시~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코로나 19 확진자 사전 투표 중, 확진자가 1층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며 3층에 별도로 마련된 일반인 투표장소로 올라가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중부노인복지관 사전투표소는 투표소 관계자가 확진자와 일반 유권자의 투표 동선을 분리해 확진자는 복지관 1층, 일반 유권자는 3층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기표 용지를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 등에게 전달해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대신 투표함에 기표 용지를 넣도록” 한 선관위 지침에 불만을 품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확진자 기표용지를 바꾸기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들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직접 투표함에 넣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투표소 관계자들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선

거보조원들이 대신 받아 처리하는 등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이후 다른 확진자들의 경우 경찰 입회 하에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현장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벌어졌다.

지난 5일 광산구 수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투표에 참여했던 확진자 A씨는 광주일보에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작은 봉투에 담아 갖는데,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투표함에 넣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일부 확진자들이 항의했지만 매뉴얼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변협도 전국에서 발생한 이같은 사례 등을 들어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전체적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허술한 준비 문제도 제기됐다.

A씨는 “확진자들은 오후 5시부터 이동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집에서 나와 줄을 섰는데, 정작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됐고 별다른 안내도 없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소가 야외에만 설치돼 확진자들이 강한 바람을 맞으며 긴 줄을 서며 마냥 기다린 점도 부실한 관리로 꼽힌다. 여기에 확진자들이 대기 물리면서 투표 시간이 길어지고 일부 확진자들은 이 과정에서 추위를 피해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자치구 등의 실수로 선거권을 잃게 된 경우도 발생했다. B씨는 지난 5일 사전투표차 광주시 동구



지난 5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장을 찾았다가 선거인명부에 포함돼있지 않았으며 투표용지를 지급받지 못했다.

B씨는 자초지종을 알아보다 등록거주지(본적지)인 나주시 공무원의 실수로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공무원이 실수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아닌데도, 과거 범죄 전력을 토대로 ‘선거권 없는 자’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화순군의 실수로 선거권이 없는 자로 분류되면서 광주시 광산구 사전투표소에 문의했다가 선거인 명부에서 빠진 것을 확인했다. 동구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난달 14~16일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마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 선거권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선관위, 투표용지 촬영·공개 검찰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불상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촬영한 후, 이를 최소 1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남은 투표기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 ‘소테크’ 해보실래요? 28억원 챙긴 유통업자

한우 구입해 되팔면 돈 된다며

지인들 속인 유통업자 징역형

‘소테크’ 해보실래요? 한우를 구입해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축산물 유통업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축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 ‘한우 투자’ 등으로 지인들을 꾀어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 축산업자인 그에게 속은 지인들은 무려 28억원을 투자비로 넘겼지만 투자금은커녕, 대부분 원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한우를 구입해 되팔면 이익이 많다”, “한우 사육업자가 갑자기 사망해 키울 수 없게된 소를 사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허가받지 않고 키우다 정부 단속을 앞두고 싸게 내놓은 소를 사 다른 농장에 넘기면 마리당

100만원씩 벌 수 있다’, ‘한우 한 마리당 300만원씩 투자하면 마리당 50만원씩 이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LA 갈비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2억 48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직업적 특수성에 오래 알고 지낸 지인 14명이 A씨 말을 믿고 거액을 넘겼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4년 간 지인들에게 받아 가로챈 투자비 명목의 돈만 28억 9000여만원. 피해자들은 24억원이 넘는 돈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이 4년에 이르면서 피해자도 14명까지 늘었고 24억원을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성차별 여전하네...여성 직장인 상대 ‘3대 갑질’은

세계여성의 날 앞두고 신고사례 분석...①괴롭힘 ②성추행·성희롱 ③임신육아 갑질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퇴물 취급을 당한다.”, “컴퓨터를 들여다보는척 하며 몸을 밀착시키거나 손을 슬쩍 잡기도 합니다.”

노동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직장인을 상대로 한 신고 사례를 분석, ‘3대 갑질’을 발표했다.

단체가 발표한 3대 갑질은 ▲괴롭힘 ▲성추행·성희롱 ▲임신육아 갑질 등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에는 청소·커피·설거지 등 허드렛일 등을 시키는 반면, ‘예쁘다’, ‘날씬하다’ 등 외모 폼평에 웃차림 지적질 등의 차별과 편견이 포함됐다.

직장 상사가 수고한다며 손을 잡고 슬그머니 어깨를 감싸는가 하면, 실수한 듯 특정 신체를 접촉하는 사례 등의 성추행·성희롱 갑질도 여전했다. 올해 2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336건 중 성희롱·성추행 제보는 22건에 달했다.

임신 육아 갑질의 경우 임신했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고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진급마저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단체는 분석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자리가 없어지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직종으로 변경시키고 허드렛일을 시키는 갑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단체측 설명이다.

반면, 여성이 이같은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일은 회사를 그만둘 각오가 아닌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익명 신고센터를 만들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는 등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직장갑질 119측 입장이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노동자가 직접 고용부 노동위원회에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만큼 적극 홍보해 직장 내 성차별을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